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평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규정 (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운영 및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다. 사무 지원 및 준용,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안 제5조)
- 라. 인력 등 지원,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7조)
- 마.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검토보고

- 가. 위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평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관련 지원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조례로

나. 제1조(목적)는 인천광역시부평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제2조(정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대행기관”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는 대행기관의 장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라.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며, 제5조(지도 감독)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필요시 지도.감독할 수 있고, 제6조(인력 등 지원),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인력이나 운영지원,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마. 제8조(포상)는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위원을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으며, 제9조(시행규칙)는 조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바. 검토결과 제5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는 등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나, 문맥에 맞지 않은 “검사하는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며 이 외는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조례안 | 수정의견 |
|--|---|
| 제5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u>검사하는 등</u>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제5조(지도 감독) ----- ----- ----- ----- 검사하게 하는 등 -----. |

4. 관련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9조(사무기구) 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그 밖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보(補)한다.
<개정 2010. 5. 20.>

③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통일자문회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직을 겸하게 할 수 있고,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사무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사무처의 조직 및 직무범위
2.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정원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8.]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되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한다. 다만,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주재한다.

③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역회의의 회의 결과의 종합에 관한 사항
2. 지역회의의 조직·운영
3. 그 밖에 지역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5. 28.]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조(대행기관 등) ① 의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② 의장이 대행기관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지역회의의 회의 소집 및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③ 대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또는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출신의 부의장 또는 지역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4조(위원의 위촉) ① 법 제10조제1호 및 제5호의 위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의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고, 법 제10조제2호 및 제4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개정 2013. 8. 13.>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지역의 지도급 인사: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2. 이북5도 대표: 이북5도지사
3. 재외동포 대표: 해당 지역 관할 공관장
4. 주요 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대표급 인사 또는 구성원: 주무관청의 장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사무처장은 미리 위촉대상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

제30조(협의회)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의장은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둘 이상의 협의회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출신 지역 및 협의회 참여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3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7. 30.>

1.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여론 수렴

2. 해당 지역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3의2.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

3의3.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 회장은 의장이 임명하되, 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 회장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협의회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되, 지역이나 여건 등을 고려해 개최 시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0.>

⑤ 협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7. 30.>

⑥ 협의회는 위원 수 및 지역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회에는 지회장을 둔다. <개정 2019. 7. 30.>

⑦ 제3항에 따른 협의회 회장의 임명 또는 지명, 제4항에 따른 협의회 회의와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및 지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9. 7. 30.>

[전문개정 2012. 2. 29.]

[제목개정 2019. 7. 30.]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9.]